

이슈브리프 900호
(2026. 9.18)

2026 미 중간선거 여론 지형과 시사점

제900호

김민정 mkim@inss.re.kr



국문초록

지난 9월 9~10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사상 첫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 대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성인 시민 1인당 5천 달러의 '트럼프 배당금'을 상·하원 유지 조건으로 공언하였다. 트럼프 개인의 지지율이 30%대 초중반으로 떨어진 국면에서 이러한 파격 카드를 내놓은 배경을 두고 개인 지지율을 방어하려는 시도라는 해석과 개인 지지를 넘어 정책 노선을 유권자에게 관철하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병존하며, 이를 가려내려면 트럼프가 내건 관세·이민·경제 대응 각각에 대한 유권자 수용도가 개인 지지율과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함께 살필 필요가 있다. 오는 11월 3일 미국에서는 상원 35석, 하원 435석 전원, 주지사 36석을 선출하는 중간선거가 시행된다. 연방의회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이 6%대 우위를 점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대 초중반에 머물러 있어, 미국 주요 언론에서는 이를 민주당의 하원 탈환 가능성과 연결하고 있다. 이 글은 한국을 비롯한 해외로 전달되는 미국 정치 보도와 그 집계 수치가 중간선거 결과를 전망하는 정확한 지표인지 검토한다. 예컨대 트럼프 대통령에 확고한 지지를 보내는 폭스뉴스의 전국 시청자 수는 경쟁 매체인 CNN과 MS NOW(구 MSNBC)를 합친 규모를 상회한다. 시청률이 여론조사를 대체할 수 없는 간접 지표라는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이를 통해 미국 여론이 분화된 정도와 트럼프 지지 기반의 견고함을 가늠할 수 있다. 아울러 트럼프 개인에 대한 낮은 지지율과 비판이 그의 정책에 대한 평가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살펴본다. 이민 정책에서는 여론이 트럼프의 강경 집행에 반발하는 국면에서도 야당인 민주당 중도파가 이민 축소 노선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였고, 관세·경제 대응에서는 트럼프 개인 지지율과 정책 평가가 함께 낮은 수준에 머무르며, 이란 전쟁의 국기결집 효과가 여당의 국내 경제 책임론을 상당 부분 흡수하고 있다. 의회 내 대중(對中) 강경 노선은 정당을 가리지 않고 유지되고 있으며, 민주사회주의자(DSA) 계열이 뉴욕·미시간 등 예비선거에서 상원 경합 구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그 파장을 함께 검토한다. 이에 본고는 미 여론 지형과 지지율 해석의 한계를 짚고, 이민·물가·중동전쟁·관세를 중심으로 주요 쟁점과 여론조사 판세를 검토한 뒤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를 정리한다.

키워드: 미국 중간선거, 트럼프 지지율, 트럼프 배당금, 댈러스 전당대회, 미국 이민 정책, 미국 관세, 중동 전쟁, 민주사회주의자(DSA), 대북정책

지난 9월 9~10일 공화당 전국위원회(RNC)는 사상 첫 중간선거 기간 내 전당대회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개최하였다. ‘트럼프 팔루자(Trumpapalooza, 트럼프 대잔치)’라고도 불린 이 대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입을 재원으로 성인 시민 1인당 5천 달러의 ‘트럼프 배당금(Trump Dividend)’을 지급하되, 11월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최소 1조 달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이 공약은 관련 법안 조차 발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되었으며, 칩 로이(Roy) 하원 의원 등 재정 보수파의 즉각적 회의론과 재원 마련의 합법성을 둘러싼 초당적 비판을 불렀다. 반면 공화당 상원 선거위원회(NRC)와 가까운 버니 모레노(Moreno) 상원의원은 관련 이행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CNBC, 2026.9.10). 대통령 지지율이 임기 최저 수준인 상황에 자신의 대표 정책인 관세의 성과를 자신의 이름과 결합해 유권자에게 현금으로 직접 환원하겠다는 것이다.

이 파격 카드의 실효성을 가늠하려면 관세·이민·경제 대응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유권자 수용도가 트럼프 개인 지지율과 얼마나 동조하고 얼마나 이탈하는지, 또한 해당 메시지가 어떤 매체를 거쳐 어떤 유권자층에 전달되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이에 본고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 여론 지형과 트럼프 정책 노선의 향방을 살펴본다. 수치상 민주당이 우세를 보임에도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경쟁력을 유지하는 배경, 그리고 유리한 국면에 놓인 민주당이 내부에서 좌클릭 압박에 직면한 상황을 함께 살펴본다. 이를 통해 모순처럼 비치는 미국 사회 각 영역의 현상을 세부 증거와 함께 짚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미 여론 지형 해석의 한계

해외로 유통되는 미국 정치 보도가 소수 통신사와 일부 유력 일간지에 집중되는 현상은 오래전부터 지적됐다. 로이터저널리즘 연구소(Reuters Institute)의 Digital News Report를 비롯한 매체 이용·인용 관행 연구에서도 국제적으로 유통되는 미국 뉴스가 AP·로이터·뉴욕타임스·워싱턴포스트·CNN 등 특정 매체 군에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국내의 미국 정치 보도 역시 이러한 경로의존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그 결과 한국과 해외 언론의 미국 선거 전망은 유사한 오류를 반복해 왔다. 2016년에는 힐러리 클린턴의 낙승 예측이 지배적이었으며, 2024년에도 박빙 또는 민주당 우세로 점쳐지는 보도가 대부분이었다. 두 사례 모두 특정 매체 환경과 문화적 전제를 중립적 시각으로 오인한 데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케이블뉴스 시청률은 미국 유권자의 특정 집단이 매일 어떠한 정치적 프레임을 소비하는지를 가늠하는 간접 지표로 참고할 만하다. 2026년 1분기 기준 폭스뉴스는 프라임타임 평균 약 260만 명의 시청자를 확보한 반면, 또 다른 주요 채널인 CNN과 MS NOW (구 MSNBC)의 합산치는 약 190만 명에 그쳤다. 폭스뉴스는 단독으로 시청 시간 및 프라임타임 부문 모두에서 케이블뉴스 시청 점유율의 약 60%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20분기 연속 1위, 프라임타임 기준으로는 97분기 연속 1위에 해당하는 수치다(폭스뉴스, 2026.4.1; Adweek·TVNewser, 2026.4.6). 트럼프 지지율이 수개월째 하락하던 2026년 8월에도 폭스뉴스의 프라임타임 시청자(213만 명)는 CNN과 MS NOW의 합산치(156만 명)를 크게 상회하였다. 폭스뉴스의 대표적인 주말·낮 시간대 프로그램은 CNN과 MS NOW의 대표 프로그램을 시청자 수 기준 2~3배 앞선 것으로 조사되었다(The Desk, 2026.9).

물론 이러한 시청률 우위가 폭스뉴스 시청자층이 미국 유권자의 과반을 점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여론조사를 대체할 지표도 아니다. 그러나 CNN·뉴욕타임스·AP통신을 주된 경로로 미국 정치를 접하는 해외 독자에게는 잘 포착되지 않는 사실이다. 폭스뉴스가 대체로 현 행정부에 우호적인 프레임을 유지하는 가운데, 수천만 명의 미국 유권자가 경제·이민·이란 전쟁 등 주요 사안을 이러한 서사로 매일 접하고 있다. 해외 보도의 골격을 이루는, 이른바 ‘주류’ 서사도 여전히 상당한 규모의 청중에게 도달하고 있으나, 공화당의 메시지가 미국 국민에게 어느 정도로 전달·소비되고 있는지를 가늠하려면 이러한 비대칭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지율 중심 해석의 한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실제로 저조하다. 주요 여론조사 평균치 기준 9월 현재 지지율은 30%대 초중반, 부정 평가는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이다(로이터·입소스 33%:63%, CNN·SSRS 35%:63%, 매사추세츠대 애머스트 32%:64% 등). 보수 성향 라스무센 조사에서만 지지 42%로 다소 높게 나왔다. 중간선거 섹션상 특히 중요한 무당층 지지율은 34%로 2018년 민주당이 41석을 얻은 ‘블루웨이브’ 직전 공화당이 무당층에서 기록한 36%을 밑돈다(Silver Bulletin, 2026.9). 트럼프의 2024년 지지층 내 지지율조차 2025년 초 이후 약 10% 하락했고 공화당 지지층 내 지지율 역시 89%에서 75%가량으로 낮아졌다(포브스, 2026.9.3.).

해외 보도는 이러한 트럼프 개인 지지율 하락을 곧 정책 반감이나 민주당 압승으로 연결 짓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이민 정책에서는 여론이 트럼프의 강경 집행에 반발하면서도 야당인 민주당 중도파가 오히려 이민 축소 노선을 수용하였고, 관세·경제에서는 개인 지지율과 정책 평가가 함께 낮으며, 이란전의 국기결집 효과는 여당의 국내 책임론을 상당 부분 흡수하고 있다. 따라서 지지율 수치만으로 중간선거 판세를 읽어내기 어렵다.

중간선거의 주요 쟁점: 이민·물가·이란전·관세

이민 정책에서는 야당인 민주당 내부에서 종전 노선을 이탈하는 흐름이 관찰된다. 이민 축소를 지지하는 여론은 2024년 6월 55%로 2001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뒤(갤럽, 2024.7) 2025년 중반 30%까지 낮아졌고 2026년에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며(갤럽, 2026.7), 트럼프의 이민 정책에 대한 지지율 역시 2025년 2월 50%에서 지난 2월 집권 2기 최저치인 38%까지 떨어졌다(GV Wire, 2026.2.17). 이러한 하락은 정책 방향보다 집행 방식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2026년 1월 미니아폴리스에서 발생한 이민세관단속국(ICE)·국경순찰대(CBP) 요원 총격 사건 직후 실시된 조사에서 응답자의 58%가 ICE 단속을 두고 ‘도를 넘었다’라고 답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주목할 점은 여론이 강경 집행에서 이탈하는 국면에서도 민주당 내부가 이민 축소 노선을 부분적으로 수용해왔다는 사실이다. 작년 8월, 하원 중도·중도좌파 성향 의원 115명이 소속된 새 민주 연합(New Democrat Coalition)은 국경 단속·추방 예산 유지와 합법 이민 경로 확대를 결합한 정책을 제시하였다(Third Way·New Democrat Coalition, 2025). 물론, 이후 라켄 라일리법 찬성표를 던졌던 일부 의원이 이를 번복한 사실(Minnesota Reformer, 2026.3.2)을 근거로, 이러한 움직임을 공화당의 불법 이민 의제 독점을 견제하려는 수세적 재편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관용적 이민 노선을 견지해 온 민주당 주류가 국경 단속·추방 예산 유지를 공식 천명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반면 관세와 경제 대응에서는 개인 지지율과 정책 평가가 모두 저조하다. 관세 지지는 34%에 그쳤고 반대는 64%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신규 캐나다 관세 지지는 20%로 반대 57%에 크게 밀렸다(퓨리서치, 2026.2; 뉴욕타임스, 2026.2.20; 로이터·입소스, 2026.9.1). 경제 대응 평가 역시 지지 32%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부정 평가는 63%로 사상 최고에 달하였다(AP·NORC, 2026.8; 유고브·이코노미스트, 2026.6). 결국 이민 정책에서는 여론과 야당의 재편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 반면, 관세와 경제 대응에서는 개인 지지율과 정책 평가가 동반 하락하고 있다.

이번 중간선거의 또 다른 주요 변수인 물가는 통상 야당에 반사이익을 안기는 이슈이지만, 이번 조사에서 민주당 우위는 8%포인트에 그쳐 해석의 여지가 남는다. 8월 28~31일 실시된 로이터·입소스 조사에서 등록 유권자의 47%가 생활물가를 최우선 투표 요인으로 지목하였고, 트럼프의 물가 대응에 대해서는 71%가 부정적, 22%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2026.8.31). 2026년 중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연준 목표치(2%)를 웃도는 약 3.4%,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약 4.15달러로, 두 수치 모두 이란 전쟁이 에너지 시장에 미친 영향으로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 분야에서 트럼프의 순 지지율은 약 33%포인트, 물가·생활비 대응 긍정 평가는 약 4분의 1에 그쳤다(폭스뉴스, 2026.8). 그럼에도 생활물가 대응 신뢰도에서 민주당이 공화당을 앞선 폭은 36% 대 28%로 8%포인트에 불과하며, 이는 실버 불레틴 등 일반 정당 지지도 조사의 민주당 우위(6%대)와 거의 같은 수준이다. 트럼프 부정 평가가 71%에 달하는 국면이라면 야당 우위가 이보다 크게 벌어져야 한다는 전제에서 볼 때, 이란 전쟁 결집 효과와 DSA 좌클릭 역풍이 민주당 우위를 상쇄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물가 불만이 곧 야당 승리로 이어진다고 전제해 온 미국 주류 언론과 해외 보도의 통념과 상이한 결과다(The Hill, 2026.8).

중동 전쟁의 장기화 전망은 언론 지형과 유가에 지속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로이터·입소스 조사에 따르면 정당 성향과 무관하게 미국인 약 80%가 미군 개입의 장기화를 예상한다. 지난 2~3월 케이블뉴스 시청률이 이란 보도를 중심으로 급등하면서 국내

현안은 후순위로 밀렸다. 국제 위기 국면에서 여당이 경제 책임 추궁을 상당 부분 회피할 수 있다는 국기결집 효과와 부합하는 양상이다. 다만 걸프 해상운송 교란이 유가 상승의 직접적 요인으로 지목되는 만큼(CRS, 2026), 전쟁 장기화는 물가 부담을 통해 여당에 역풍으로 되돌아올 여지도 있다.

관세 정책은 앞의 두 변수와 달리 공화당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 경제 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의 광범위한 관세 권한을 위법으로 판결하면서 관세 재원의 상당 부분이 무효화되었고, 행정부는 232조·301조 등 다른 권한으로 체계 일부를 대체·유지하였다. 그러나 앞서 공언한 ‘2천 달러 관세 배당금’은 법안 발의와 재원 확보 없이 사실상 이행되지 못하였으며, 판결 이후 이행 전망은 한층 낮아졌다(악시오스, 2025.11.17). 배당금 미이행은 물가 대응 부정 평가 71%와 맞물려 유권자 신뢰를 훼손하고 있으며, 민주당 하원 선거 대책기구(DCCC)는 공화당 목표 지역구 35곳에서 관세 發 물가 상승을 주된 캠페인 메시지로 내세우고 있다(Semafor, 2026).

여론조사 관세와 해석상의 유의점

최근 대부분의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이 6%대 우위를 보인다 (실버 불리틴 +6.6%p, 디시전데스크HQ·피프티플러스원 각 약 +6%p, 2026.9). 이는 민주당이 하원에서 41석을 확보한 2018년 직전 환경과 유사하다. 주요 비 당파 예측기관 대부분이 하원 민주당 탈환을 우세로 전망하며, 상원 탈환 확률도 약 57%로 제시된다 (국폴리티컬리포트·사바토크리스털볼·인사이드일렉션스·실버 불레틴, 2026.9).

다만 이 예측에는 민주당 우위의 과대·과소평가 가능성이 병존한다. 과대평가 요인으로는 먼저 주 단위 조사의 구조적 오차를 고려할 수 있다. 2020년 메인주 상원 선거에서 거의 모든 조사가 수전 콜린스의 낙선을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9%포인트 차 승리로 귀결되었다. 이번 상원 경합 주 가운데 메인·알래스카·아이오와도 고령층·농촌 비중이 높고 디지털 접근성이 낮아 동일한 조사 오차가 재현될 수 있다(뉴스위크·Axios, 2026.9). 이어 텍사스·미주리·노스캐롤라이나의 새 선거구 지도가 민주당 득표율 우위의 의석 전환율을 낮추도록 설계된 점도 변수이다. 아울러 전문가 예측과 유권자 인식 사이의 시차도 존재한다. 예컨대 작년 말 한 시민 예측 조사에서 응답자 과반이 공화당 하원 수성을 예상하였다(Sabato's Crystal Ball, 2025.11.21). 반면 과소평가 요인으로는 텍사스 팩스턴·노스캐롤라이나 왓리 등 개별 후보의 저조한 지지율이 공화당 상원 판세를 끌어내릴 가능성, 이란 전쟁 장기화와 미군 사망자 누적이 국기결집 효과 소진과 반전 정서 확산을 통해 무당층의 공화당 이탈을 유발할 가능성, DSA 프레임의 부메랑 효과가 제한적일 경우 민주당 주류 후보의 물가·이란 이슈 집중이 격차를 확대할 가능성 등이 있다. 결국 전문 집계기관 수치와 유권자 인식 사이의 간극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전망 및 시사점

현재 여론조사 흐름이 유지되고 남은 두 달간 큰 이변이 없을 경우 민주당의 하원 다수당 회복과 상원의 근소한 구도가 유력 시나리오로 언급된다. 반면 이슬라마바드 MOU로 중동 전쟁 종전 협상이 일단락되고 유가가 안정되며 부동산이 막판 공화당으로 결집할 경우 공화당의 상·하원 수성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때는 하원 선거구 재획정이 민주당의 득표율 우위를 의석으로 전환하기 어렵게 만든다. 상원 경합지 대부분이 원래 공화당 우세 지역

이라는 점, 트럼프와 콜린스류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반복적으로 과소 평가되어 온 전례도 함께 작용한다. 후자의 시나리오는 국제적으로 유통되는 미국 정치 보도가 공화당·보수의 언론 지형·정책 흐름·풀뿌리 정서를 구조적으로 과소평가해 온 탓에 해외에서 과소 인지되는 경향이 있다. 미 대선에서 반복된 예측 실패가 정책 판단에서 재현되지 않으려면 번역·통신사 경유 요약보다 1차 자료와 주(州) 단위 보도를 직접 참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와 연관된 미국의 대외 정책 상당수는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예컨대 대중(對中) 통상 정책의 경우, 민주당은 트럼프 관세의 비용은 비판하되 대중 강경 노선의 근간을 뒤집으려는 의지가 크지 않으며, 오히려 중국의 대미 투자·기술 접근 제한을 주장하는 의원이 늘고 있다. 따라서 다수당 교체가 미·중 통상 환경을 초기화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관세 수준과 관세 수입 연계 ‘트럼프 배당금’ 구상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 특히 연방대법원의 관세 권한 제한 판결이 추가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경우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정당 간 대립 구도보다는 연속성을 보여 왔고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강제노동·사이버범죄를 안보 사안과 연계하는 접근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재회동 의사를 재차 공개적으로 밝혔고 상원 외교위 지도부 교체가 ‘오토 웬비어 법’ 및 ‘북한인권법’ 재승인 예산 다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어,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일정 부분 변동의 여지는 남아 있다.

민주당의 하원 탈환은 행정부 조사 역량 확대와 연결된다. 이는 통상 협상·인선·재량적 외교 등 지속적 관심과 자원 배분이 필요한 양자 현안의 진행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반면 상원의 항배는 동맹 관리와 인도-태평양 정책에 직결된다.

조약·핵심 인준 관할권을 지닌 상원 외교위원회는 샤힌(Shaheen) 의원의 불출마로 차기 민주당 간사 후보가 공석 상태이며, 위원회 구성 자체가 이번 선거로 변동할 여지가 있다. 이에 다수당 항배뿐 아니라 새로 진입할 개별 상원의원의 향후 위원회 지도부 역할까지 함께 추적할 필요가 있다.

//끝//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